

# 국제사회 공조 ‘투-트랩’ 불가피

### 〈당근-채찍 병행〉

## ■ 대북·안보정책 바뀌나

북한의 핵 실험 강행 사태를 맞아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과 전시 작전통제권 조정 등 전반적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게 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대북 정책 변화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도 대북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참여 정부가 당장 대북 포용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대북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당분간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조정 및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10일 국회 통일통위예 출석,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 非核원칙 깨져 '무조건 끌어안기' 한계

## 포용정책 기본틀 유지속 부분적 조정

다른 향후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과 관련, “평화변형 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핵심함으로 남북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

이와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기 및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도자들  
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북  
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과연 전작권 문  
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다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전작권 환수의 시기나 내용도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국방부도 전작권 환수 협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밝혀 이런 관측은 더욱 더 설득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빌어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대북 및 안보정책은 조건 없는 북한 끌어안기보다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 속에 당근과 채찍을 조율하는 투-트랙 접근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채찍으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  
기, 미·일의 미사일 방어체계 동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당근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결과에 따라 경제 협  
력 및 제재 완화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  
측되고 있다.

정지권 관계자는 “한 상황에서 참여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며 “이번 북 핵 실험 사태로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등 안보 정책도 일정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 온 DJ

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 영접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전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국회 대북 결의안 불발

우리 “포용정책 무조건 폐기 안된다”

## 한나라, 지원 중단·내각 총사퇴 요구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당초 북한 핵 실험 관련,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상황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의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질 의만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정부 대

을을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 재검토와 대북 지원 중단,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쪽짜리 보고서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송구스럽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  
위원 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북한 핵  
사태는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  
다는 어떠한 담보나 확신도 없다”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사이에 정쟁을 자제할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도발이고 엄숙한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대북수해 물자 지원 등 모든 대북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대북 결의안 불발

## 北핵실험 대응 입장차

# 국회 대북 결의안 불발

## 北핵실험 대응 입장차

[illegible]

#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TOWNGENT

INGI

30

Infant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빙점

☎(062)511-0249

상설할인마트

상설할인마트